

민중기 목사의 ‘기독교 정치의 가능성과 독특성’에 대한 논평

박득훈 목사(안덕교회)

독재정권시절은 물론이거니와 민주화가 이룩된 한참 후까지도 정교분리 원칙이 정치와 기독교회의 관계를 설정하는 지배적 사고였다. 그러나 정작 교계지도자들은 조찬기도회 혹은 성명서 발표란 수단을 통해 독재정권을 지지하는 정치참여를 한 셈이었다. 정교분리 원칙은 사실상 교계지도자들이 정권에 저항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비판적 운동을 저지하는 통제수단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출범을 전후로 해서 보수적 교계지도자들의 정치참여 방식이 바뀌기 시작하였다. 교인들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시청 앞 광장에서 구국기도회 혹은 국민대회를 열고 노골적으로 정부의 정책과 노선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현하기 시작하였다. 비록 국회의원을 배출하는데 실패하기는 하였으나 기독교정당을 창당하여 총선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그런가하면 금식과 삭발을 하면서까지 사학법 재개정을 촉구하여 여당을 굴복시켰다.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한나라당의 이명박 장로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교계 일부에서는 다시 한 번 장로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여론을 노골적으로 혹은 은근히 조성하고 있다. 과연 그리스도인은 어떤 기준으로 정치에 참여하며 대통령을 선택해야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할 시점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기독교정치의 가능성과 독특성을 밝힌 민중기 목사의 글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하겠다. 이제 민목사의 논지를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논평을 하고자 한다.

논평

1. 기독교정치의 가능성

리처드 니이버가 제시한 그리스도와 문화의 관계유형론과 미국의 사례를 간략하게 소개함으로써 기독교정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했다.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 생경한 것이 아님을 보여준데 의미가 있다 하겠다. 한편 ‘공중정의를 수행하는 국가’라는 항목에서 정치질서는 타락을 향해 열려있는 인간의 열정을 부분적으로 억제하는 정의를 위한 도구임을 강조함으로써 국가와 정치를 부정하는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간략하게나마 잘 밝히고 있다.

2. 기독교정치의 독특성

첫째, 기독교정치의 독특성을 규정하는 것으로 기독교정신에 입각한 정치철학과 기독교적 대안을 창출하여 항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권력 장치를 들고 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장로가 대통령이 된다는 사실로 기독교정치가 실현되는 것은 아님을 잘 설명해준다. 한편 기독교인들이 단지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둘째, 그러한 기독교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되려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에 머물러선 안 되고 정치적 제자도로 무장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정치적 제자도의 핵심은 국민의 기독교신앙을 진작하거나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기독교가 우위를 점하게 하는데 있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양심에 새겨진 정의를 사회에 구현되게 하는 데 있다. 민목사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는 교계일각에서 잘못된 동기로 일어나고 있는 장로대통령 만들기 움직임에 대한 적절한 비판으로 읽을

수 있다. 대통령 후보가 장로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의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정의를 사회에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기독교정치의 정체성을 담보해줄 공중정의의 내용을 밝히고 있다. 국가가 실현해나가야 할 공중정의의 핵심은 다양한 사회적 가치가 분배되고 채택되는 사회의 각 영역들 사이의 경계를 보호함으로써 그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선 두 가지 형태의 국가권력에 의한 전제(tyranny)를 경계해야 한다. 하나는 국가권력이 다른 가치 예컨대 자본에 의해 식민화되어 그 가치를 다른 영역에 까지 강요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정치권력 자체가 절대화 되어 다른 영역의 가치를 자신에게 강제로 복종시키는 것이다. 두 번째 형태의 전제를 방지하기 위해선 국가권력은 마이클 윌저가 구체적으로 제시한 대로 일정한 한계 내에 머물러야 한다.

이상의 공중정의에 대한 이해는 권력의 이중적—긍정적이면서 동시에 부정적인—속성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잘 반영한다는 점에서 매우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공중정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보는 성경적 전통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생긴다.

넷째, 기독교정치의 정체성이 더욱 확고해지려면 정의구현의 신학적 근거를 제공해주는 정치적 영성을 갖춰야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 실례로 네덜란드의 신학자이자 언론인이요 정치인이었던 아브라함 카이퍼를 들고 있다. 그의 정치적 영성은 소위 영역주권론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왕 되심은 문화변혁과 사회개신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윤리적 당위이며 과제이다.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의 왕 되심은 각 분화된 영역에서 독립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사회의 다양한 영역들은 자신의 범주와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카이퍼는 영역주권론으로 대변되는 정치적 영성에 근거하여 잘못된 세속주의, 자유주의, 마르크스주의에 대항하여 반혁명당을 건설하였다. 물론 그는 교회가 정치를 통제하는 신정(theocracy)의 교권적 강제는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인간의 양심 속에 하나님의 법이 존재한다고 믿었다. 그러므로 기독교신앙의 전통을 정치개혁을 위한 정신으로 삼아도 보편성을 확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그리스도의 왕권이 사회의 모든 영역에 구현되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정치인의 사명이란 점을 잘 밝혔다는 점에 영역주권론의 공헌이 있다. 하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3. 정치적 영성의 핵심으로서의 영역주권론에 대한 문제제기

1) 이미 세속화와 종교적 다원화가 심각하게 진척된 사회에선 그 보편성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다. 예컨대 한국사회에서 기독교정당을 창당하면서 그 강령에 주권적 권위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서만 발견되며, 인민주권론은 받아드려질 수 없는 반면 어느 특정 기독교가문의 주권은 하나님의 역사적 인도아래 확인된다고 주장한다면 시민적 지지를 확보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이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정신과 조화되기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인민주권과 국가주권론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하나님 주권의 확인이라는 것은 매우 막연하며 위험스럽기 까지 하다. 신정정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회의 특정 그룹이 하나님의 주권을 대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세속화된 사회에서 실현하는 방법은 민주주의를 벗어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영성이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호소하기 보다는 마틴 루터 킹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중정의의 내용을 세속적 언어로 재해석하여 국민들의 양심에 호소함으로써 보편적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능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각 영역들의 독립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영역간의 밀접한 관계를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낸다. 민목사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예컨대 정치와 경제 영역은 서로 독립적인 부분도 있지만 결정적인 측면에서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얽혀 있다.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는 국가나 사회가 자본이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자유시장의 작동을 간섭해선 안 된다는 정치철학 그리고 그를

구현하는 법과 제도의 뒷받침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체제를 지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역주권론에 근거하여 정치논리로 경제를 간섭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모순을 범할 위험성이 있다.

3) 기독교신앙인들이 지지할 수 있는 공중정의와 각 영역의 독립적 규범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찾아내느냐에 대하여 충분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각 영역의 독립성과 평등원칙을 주장하고, 혁신과 반동의 양극단을 피하며, 법치를 강조하며, 공복의 양심을 통해 역사하는 법에 호소하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자칫 잘못하면 똑 같이 영역주권론을 신봉하면서도 특정 정치인이 속한 사회의 성격에 따라 전혀 상반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고 보여 진다. 예컨대 카이퍼는 인종차별주의를 반대했지만 같은 남아프리카의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아파타이트의 신학적 근거로 영역주권론을 제시하였다.

이를 피하기 위해선 좀 더 구체적인 정치윤리적 방법론의 확립이 요청된다고 본다. 성경에 나타난 정의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 사회현실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과 정치철학적 이해, 그리고 다양한 실천적 노력이 함께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그 구체적 규범들을 찾아내는 것도 한 방법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위의 논평을 근거로 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린다.

질문

1. 이명박 대선후보 지지자들은 그를 경제대통령으로 내세운다. 그의 도덕성 시비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지도가 떨어지지 않는 이유도 그가 한국경제를 살려낼 수 있는 지도자라는 기대감 때문일 것이다. 그의 경제적 관점을 비춰 볼 때,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가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도구이자 경제의 부수현상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감지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는가?

2. 이명박 후보가 장로이기는 하지만 정치적 제자도를 갖춘 지도자라는 확신이 안 들 때, 반면 다른 후보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정의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정치적 제자도에 더 가깝다고 생각될 때, 그리스도인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3. 각 영역의 규범을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 기독교대통령 혹은 정당이 국가권력에 의지해서 다른 영역의 주권을 회복하려고 할 때 국가간섭주의라는 저항을 받는다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변호할 수 있겠는가?

4. 각 영역의 독자적 주권을 확보하는 것으로 과연 공중정의의 책임을 다 한 것인가? 성경적 정의 개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부당하게 억압당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방과 영영주권의 회복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5. 기독교문화와 사회의 전통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 카이퍼의 네덜란드와는 달리 종교다원사회인 한국에서도 반혁명당 같은 기독교정당의 출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